

# 국민의힘, 광주서 첫 당권 주자 합동연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30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전남·제주 합동 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지역순회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의 첫 일정을 호남에서 개최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역사회 합동토론회의 첫발을 바로 이 호남, 제주에서 디디자고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오늘 일찍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 김기현 “우리 잘하면 얼마든 민심 바뀔 수 있다” 황우여 “광주에서 첫 시작, 당으로서 뜻깊은 일”

김기현 원내대표 겸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지역사회 합동토론회의 첫발을 바로 이 호남, 제주에서 디디자고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오늘 일찍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잘하면 얼마든지 민심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황우여 중앙당 선관위원장도 “합동연설회 첫 시작을 광주에서 하는 것은 당으로서 뜻깊은 일”이라며 “호남의 민심은 깊은 정을 나누며 변치 않는 의리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일념으로 당을 지켜온 이 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과 당협위원장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 김회재, 국회의원 체포·구속 동의 여부 명확 구분 개정안 발의

### “대법원 예규, 헌법 취지 위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은 최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에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

회의 동의 대상에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으로 규정하는 등 “체포”와 “구금”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 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상위법령인 헌법과 국회법에서 ‘체포’와 ‘구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인 대법원의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서는 국회법에 명시된 체포 동의요구의 ‘체포’를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시 체포영장 발부 이후 정구된 구속영장을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포 동의의 의미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회재 의원은 “헌법 국회법상 체포와 구금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에 불과한 대법원 예규가 헌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인신에 관한 사항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소병철, 김오수 후보자에 “표류하는 검찰 조직 안정·검찰개혁 완수 주력” 강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 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재의 검찰 상황과 검찰 총장으로서 시급한 임무를 제시하였다. 소 의원은,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이 마치 우왕좌왕 표류하는 배처럼 보여, 조직의 안정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70여년간의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을 맞아, 검찰이

검찰개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형사사법구조 대전환기를 맞아, 이제 검찰은 수사기관의 역할보다는, 1차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기대받게 되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지적이다. 소 의원은 “금년 통계를 보면, 검찰 송치 사건이 대폭감소했다”면서,

“이제 검찰이 1차 사건처리의 짐을 벗고, 국민들이 원하는 제대로된 수사 감시와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감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검찰의 신뢰회복 중요성을 강조하며 “검사장들이 검찰을 믿지 못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에게 수사 결과를 믿어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개탄하면서,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오수 후보자는 “(형사사법구조 변화) 검찰이 제대로 길을 갈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검찰이 인권 중심, 사법통제 중심 그리고 국민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수사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적의 취지를 살려 제대로 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영암·무안·신안, ‘민심경청 프로젝트’ 성료

### 서삼석 의원 “현장의 목소리 당 운영·정책 반영”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가 지역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경청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취임 30일과 제21대 국회 개시 1년을 맞아 현장 중심의 당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 26일 온택트 간담회 출범식을 시작으로 27일 농협 영암군지부 앞, 28일 신안 압해농협 앞, 29일 무안전통시장 등에서 소규모 간담회와 현장방문, 파라솔을 이용한 경청 프로그램 ‘찾아가는 민주당’ 등을 운영했다. 다만, 현장간담회 및 대면 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했다.

다. 행사에는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회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 당직자, 여성·청년 당원 등이 참여했다. 지역위원회는 당원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취합한 내용들을 가감 없이 중앙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무안·신안 지역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은 “청년·소상공인·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프로젝트로 당이 먼저 국민과 주민의 삶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더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당 운영과 정부 정책으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송영길 “공연 분야 규제 완화 점검”

### “코로나19 프리 지역 만들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네 번째 행보로 문화·예술인들과 만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탄력적으로 공연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열린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연극배우 이황의씨의 극장 방역지침 완화 요청에 대해 “방역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해 공연하도록 소극장 공연장의 어려움을 잘 챙기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부에 제안하는 게 코로나19 프리 지역을 좀 만들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국민성이 발전된 나라에서 하루에 600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때문에 전체 방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잉이고 비효율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이 많이 되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접종한 분들에게 4인 제한에서 플러스알파로 (추가 인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공연장도 예외로 인정해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강조했다.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